

아귀 뱃속서 플라스틱 물병 '충격'...해양쓰레기의 '역습'

목포 수산시장서 구입한 아귀 손질 중 나와...SNS에 영상 올려 일파만파
생선 뱃속서 라면스프 봉지도...우리가 버린 쓰레기 돌고 돌아 식탁으로
전남 5년간 해양쓰레기 13만여톤 수거...무단투기 단속·처벌 강화해야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 밥상까지 올라왔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광주·전남 지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해양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등 사회구성원들의 감축 노력도 시급하다.

청년사업가 홍동우(35)씨는 최근 부인이 접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홍씨 영상은 목포 청호수산시장에서 구입한 아귀 여러 마리를 손질하던 중 한 마리 배 속에서 갑자기 500ml 플라스틱 병이 튀어나오는 13초 분량의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홍씨는 광주일보와의 전화에서 "장모님이 아귀탕을 하기 위해 새벽시장에서 아귀를 사와 손질하는데, 배 속에서 플라스틱 병이 나왔고 내장도 다 찢어 버려야 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플라스틱 물병이 내장 속에 엉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어 바다

생태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는 충격적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홍씨는 "예전에도 생선 구이용으로 구입한 생선 뱃 속서 라면스프 봉지 등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바다 공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매년 급증세다.

제주대와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등은 지난 2019년 12월 한림읍 비양도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참고래를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낚싯줄이 발견됐고 소화기관에서 해양 부표에서 떨어져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스티로폼, 막이를 걸러내는 수염에서는 초록색 나일론 재질의 끈들을 확인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3월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83%가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 음료수병이나 뚜껑(26.2%)이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 부표 등 발포형 플라스틱(20.7%), 어업용 밧줄등 섬유형 플라스틱(17.1%), 비닐봉투 등 필름형 플라스틱(11.8%) 등의 순이었다.

전국 수산물의 57%를 생산하는 전남 바다 상황



아귀 손질 과정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병. 홍동우씨가 제공한 영상 캡처.

도 다르지 않다. 전남도가 최근 5년 간 치운 해양쓰레기 양도 13만 7818 t에 달한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남지역 16개 시·군에서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는 1만 2514 t(2016년)→1만 9657 t(2017년)→3만 2618 t(2018년)→3만 1704 t(2019년)→4만 1325 t(2020년)으로 급증하고 있다.

처리 비용도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으로 14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7년 36억 6000만원에서 견줘 3.85배 늘었지만 워낙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다보니 역부족이다.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해양 유입, 발생 경로를 파악해 원천 차단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에

◇전남 5년간 해양쓰레기



대한 단속·처벌 강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목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무심코 바다에 던진 플라스틱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고 있다. 플라스틱은 코로나 시대에 사용량이 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특히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동영상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 첫 광양제철 노동자 직업성 암 발생 역학조사

정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의 직업성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정부 주도의 제철업에 대한 직업성 암 역학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5일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 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는 포스코 제철소 일부 노동자 등이 폐암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제철업 작업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3년 동안 포스코 제철소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차 제철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역학조사 결과는 직업성 질환 유발 물질 파악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철업 종사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등 보상 근거로 활용된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폐암 등에 걸린 노

동자 9명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며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 이 중 3명(각각 폐암, 폐섬유증, 악성중피종 발병)은 산재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철소 노동자는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위험이 크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명씩 비강암에 걸린 남성 노동자가 나타났었다. 광양제철소 여성노동자들에게 발병된 혈액암의 경우 2010~2019년 전국직장가입자의 평균 질환 대비 19.4배 높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포스코와 하청업체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장해상 문제가 없는 지까지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화 속 세상' 마을벽화 선물

호남대학교 학생 40여명이 최근 '마을 벽화 그리기' 전공 연계

활동에 선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이용해 광주시 서구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3~5개조로 나눠,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다. <호남대 제공>

술 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3명 징역 12~4년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가담한 B(38)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새벽 광주시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객을 태운 C씨가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왔다고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A씨와 B씨는 여성을 A씨 집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재판부는 "C씨는 A·B씨의 성범죄를 예견하고도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입주 못한 지역주택 조합원들 시공사 상대 가처분신청 광주지법 "분양대금 전액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 조합원 139명이 아파트 건설사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입주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합

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외 다른 조합원들도 쌍용건설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건설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들이 입주 지연으로 입는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니거나 조합

원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운다는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 조합은 13개 동(764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기 위해 계약 금액을 1364억 400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건설사와 체결했다. 이후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50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주를 막아섰고 조합원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조합측은 건설사가 입주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요구한 조합원 565명의 추가분담금(세대당 5500

만~6000만)이 너무 많다고 총회를 거쳐 3000만원의 추가분담금만 인정키로 결의했지만 건설사 측은 더 많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상당수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 기한(2021년 2월 28일까지)이 지나도록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재판부는 "당초 약정된 공사비 중 435억원 가량이 미지급된 만큼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설사가 아파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만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